

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

2022. 8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시범 운영방안	2
1. 상품 및 업무범위 등	2
2.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	3
3.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	4
III. 향후 계획	5

I. 추진 배경

- 디지털화, 플랫폼화의 영향으로 핀테크·빅테크 등은 예금상품*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교·추천 서비스 제공을 희망

*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 (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상품)

- 예금상품 판매중개업은 타 금융상품(대출·보험 등)과 달리 금소법과 은행법 등 업권법 상 등록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*

* 은행법·저축은행법·신탁법 등 업권법에는 업에 대한 정의 및 등록근거가 없으며, 금소법 제정시 등록단위는 마련되었으나 등록요건은 규정하지 않음

- 핀테크·빅테크 기업들은 예·적금 비교·추천서비스 제공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규제특례 신청(9개 업체 수요조사 제출)

-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를 허용할 경우, 소비자의 자산관리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쟁 촉진될 것으로 기대

- 다만 급격한 자금이동으로 인한 중소형 금융사 건전성 문제, 플랫폼의 과도한 영향력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

⇒ 예금상품 판매중개업 관련 편익과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범운영 추진

- 소비자 편익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 상품, 허용대상 등 세부 운영방안을 검토
- 정식 제도화 이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만큼,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

II. 시범 운영방안

1

상품 및 업무범위 등

□ (상품범위)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·적금

- 중개 수요가 크고 관리가 쉬운 저축성 상품(예·적금)을 대상으로 함
-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(ELD) 등 특수 예금 상품은 제외
-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, 신협 등의 예·적금 상품도 포함

※ 대출상품 중개업: 은행, 보험, 저축은행, 카드, 캐피탈 등 소업권 대출상품 허용

□ (업무범위) 복수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·추천 허용

- 소비자 탐색비용 절감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1社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
- 실명확인, 예금 수취,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관련 법령취지 및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영위 제한

- ✓ (실명확인)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만 수행 가능
- ✓ (예금수취 등) 고객 금전 보호 등 측면에서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금융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

□ (허용대상) 테크기업, 금융회사 등 제한 없이 허용

-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의 수요도 큰 상황
- 금융회사의 플랫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진행

※ 대출상품 중개업: 핀테크기업 외에 은행, 보험, 저축은행, 카드 등도 영위중

□ **공정한 비교·추천**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알고리즘 요건** 적용

- 소비자에게 **유리한 조건**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안내*토록 하는 등 타 업권 입법례를 참고하여 규제 적용(코스콤 검증)

* (예)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의 금융거래내역 분석(카드, 급여계좌 등)을 바탕으로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상품 비교·추천 가능

※ **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의 알고리즘 요건**(금소법 감독규정 §6⑦)

1.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을 것,
2.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
3.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
4.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①·②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

□ **불완전 판매** 방지를 위해 **금소법상 판매·중개업자 규제** 적용

- ①임직원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, ②설명의무·광고규제·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

□ 피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한 **영업보증금 예탁 의무** 부과

- 상품 특성, 불완전 판매 가능성* 등을 고려하여 1억원으로 설정

* 보험상품 등에 비해 상품구조가 단순한 점 반영(법인보험대리점: 3억원)

- 동일 금액의 책임보험 가입시 영업보증금 예탁 대체 허용

□ 제휴업체 外 동종상품의 **시장평균 금리 정보 제공** 의무화

- 업권, 상품,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동종상품의 평균 금리*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

* (예) 업권별협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서 공시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산출

□ 급격한 머니무브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

○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·적금 신규모집액의 일정 한도*(예: 은행 5%, 저축은행·신협 3%**) 이내에서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

* 금융회사가 복수 중개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하여 규제비율 적용
(시중은행 '21년 신규모집액 평균(61.6조원) x 5% = 약 3조원)

** 저축은행, 신협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취약할 수 있는 점 고려

○ 실제 운영성과 등을 지켜보면서 플랫폼을 통한 모집비율의 단계적 확대 검토

□ 계열사 또는 특정 제휴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공시 의무 부과

□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은 만큼,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를 금지

□ 오프라인 영업의 경우 과거 관련 사고* 등을 감안하여 추후 은행 대리업 도입 등을 통해 검토(은행법 개정 TF 논의중)

* '06년 외국계은행 서울지점 예금모집인이 은행 직원으로 행세하여 예금 횡령(9.8억원), 사금융 알선(10.6억원), 사금융 대차(10.9억원) 등 소비자 피해 발생

※ 은행대리업: 은행이 아닌 자가 은행을 위하여 은행업무의 일부를 대리하는 것으로 인적·물적 요건, 사회적 신용 등을 기준으로 인가제 도입 검토중

III. 향후 계획

① 「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」 시범운영

- 신청 서비스*의 혁신성, 소비자 편익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개별 사업자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('22.10월, 혁신위)

* 현재 9개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(빅테크·핀테크 주요사 포함)

② 「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」 정식 제도화 검토

- 소비자 편익, 금융시장 안정*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를 평가('23.하반기)

* (i)과도한 자금이동(머니무브) 발생 여부, (ii)중소형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, (iii)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 등

- 성과 평가 결과 정식 제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